

'1표차' 추인... '분열 위기' 바른미래



'심각' 23일 바른미래당 이혜훈(왼쪽부터), 유승민, 장상욱, 정병국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총서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추인 재투표 끝 통과 누적된 갈등 폭발... 유승민 "동지들과 당 진로 고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성사가 정계 개편으로 이어질 것인지 주목된다.

당장, 바른미래당이 일촉즉발의 '균열 위기'에 봉착했다. 23일 열린 의원총회는 당내의 분열상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결국 1표차로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이 '아슬아슬하게' 추인되면서 분열의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다.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둘러싼 찬반 입장차라기 보다는 그동안 화합적 결함을 이뤘지 못한 당내 계파들의 누적된 갈등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상황이다.

현재 바른미래당은 바른정당 출신의 유승민계와 국민의당 출신 안철수계, 그리고 민주평화당과 제3지대론을 주장하는 일부 호남 중진의원 등 3개 계파로 나뉜 상태다. 이언주 의원이 이날 오후 공식 탈당을 선언한 것이 앞으로 가속화될 당내 분화의 '전조'로 해석되는 기류다.

여기에 패스트트랙에 반대해 온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예사롭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 의원은 표결 처리를 강행한 김관영 원내대표를 향해 "의회주의의 폭거를 자행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당의 공동창립주이면서 바른정당계를 이끌고 있는 유승민 의원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의사결정도 이렇게 1표차 표결로 해야 하는 현실에 굉장히 자괴감이 든다. 앞으로 당의 진로에 대해서 동지들과 함께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는 유 의원을 비롯한 일부 바른정당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집단탈당' 내지 '도미노 탈당'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원내 지도부의 패스트트랙 처리 방식과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진퇴 논란이 서로 맞물리면서 당내 리더십이 와해상태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 출신 안철수계 인사들 중에서도 이날 합의안을 추인한 '과반 표결' 방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패스

트랙 여진은 당내 주요 기반인 안철수계로도 확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안철수 의원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이태규 의원도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계 감철근 전 대변인은 "패스트트랙 추인은 원천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의 분열 시기는 미지수다. 당분간 각 계파가 서로 당을 차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당을 확보하면 비례대표 의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정계개편 협상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재정적 문제도 해결된다. 이에 따라 서로 당을 나가려는 이전투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악의 경우, '한 지붕 세 가족' 구조가 추서 전까지 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말을 아끼며 바른미래당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선불리 대응하기는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의 분열은 원내교섭단체의 변화 등 국회 역할 구도를 흔드는 것은 물론 제3지대론 형성을 통한 내년 총선 구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평화당에서는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의 집단 탈당으로 바른미래당과의 당 대

당 통합이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이 경우, 통합 신당은 원내 3당의 입지를 갖추면서 단기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구도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의치 않을 경우, 바른미래당의 발전적 해체도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의원들이 자유롭게 정당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일부 호남 중진 의원들의 선도 탈당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지만 파급력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여야 4당 대 한국당' 구도를 내년 총선까지 이어간다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 한국당이 주도적으로 제기하는 '정권 심판론'을 무력화하고, 탄핵 연대 당시의 '적폐 청산' 프레임에 상기시켜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감안하면 이같은 공조 구도가 계속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보수 결집의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이 제3지대에서 어떻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지가 정계 개편의 흐름을 좌우할 전망이다.

한국당 패스트트랙 반발...국회서 철야 농성

청와대 앞 규탄 기자회견도

자유한국당은 23일 여야 4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등을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키로 한 데 대한 반발로 25일까지 이틀간 국회에서 소속 의원 전원

이 참여하는 철야 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여야 4당은 해당 법안을 25일까지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에서 각각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상정키로 합의했다.

이날 철야 농성 시작에 앞서 한국당은 오후 6시 30분께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패스트트랙 저지 및 의회주의 파괴 규탄'

을 위한 기자회견도 개최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개최한 규탄대회에서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신설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 강화해서 결국 문재인 정권 마수대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말 안 듣는 사람을 숨도 못 쉬게 하는 제도"라며 "오늘부터 일단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

한 투쟁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7일에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소속 의원 전원과 당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ALL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집회를 다시 열고, 가두행진도 벌일 계획이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20일에도 당 추산 2만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 또 불발

민주·한국당,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개최 놓고 이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회의 개최를 둘러싼 여야 간 극심한 이견으로 법안 처리를 뒤로 미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심사를 위한 23·24일 행안위 소위 개최 입장을 밝혔으나, 자유한국당은 제반 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소위 개최에 난색을 보였다. 이에 따라 소위는 이날 오전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개최됐다.

민주당 소속인 홍익표 법안소위 위원장은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을) 신속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회의를 소집했다"며 "소위원장 권한으로 법안 소위 전체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행안위 한국당 간사인 이재익 의원은 소위가 개최된 지 20분 뒤 회의장을 찾아 "여야 간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은 회의"라며 "날치기 진행"이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한국당의 강한 반발에 회의는 정회됐다. 이어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역시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소위를 속개했으나 한국당 행안위원들이 또다시 회의장을 찾아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양당 의원들은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다.

결국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에 대한 심의 없이 소위는 산회했고, 여야는 추후 의사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

유시민 "직업 정치인 안한다"

정계복귀설 일축... "노 전 대통령 10주기 대대적 추모행사"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3일 차기 대선주자 관련 각종 여론조사에 자신이 상위권을 차지하는 데 대해 "처음보다(제 순위가) 내려가고 있어 다행이고 안심이다. 계속 내려가서 사라져주기를 바라겠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신수동 재단 사무실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여론조사에서 제 이름을 빼달라고 했는데, 빼주는 언론사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도 계속 넣는 언론사도 있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정계복귀 관측에 대해 "(정계 복귀를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안 믿어주면 말로는 방법이 없다"며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그분들의 희망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한다"고 일축했다.

유 이사장은 최근의 각종 현안 발언이 사실상 정치 활동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에 대해선 "국가권력의 기능과 작동 방식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개별적·집단적 활동이 정치라고 보면, '알릴레오'도 정치가 맞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의미에서의 정치는 모든 시민의 권리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이기도 하다"며 "저는 이 정치를 수십 년 동안 해왔고, 죽을 때까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 이사장은 노무현재단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를 맞아 ▲ 김대중도서관의 공동학술회의 ▲ 서울 남산 둘레길 걷기 ▲ 봉하마을 어린날 행사 ▲ 권역별 시민문화제 ▲ 추도식 등 다채로운 추모 행사를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5월 단체 "5·18 특별법 개정 합의 환영"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5월 18일 안에 처리하겠다고 합의한 것을 두고 5월 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5·18역사왜곡처벌광주운동본부(이하 광주운동본부)는 23일 논평을 통해 "5·18역사왜곡 처벌을 위한 여야 4당의 합의를 환영한다"며 "국민과 5월 영령에게 약속한 만큼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 자유한국당을 향해 "4당 합의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마지막 기회인 만큼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며 "황교안 대표가 광주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5·18기념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성의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특별법이 신속히 개정되고 이를 계기로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도 하루빨리 완료되길 바란다"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순간까지 끝까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형 연금 발전소 분양

(태양)

A 타입 식용달팽이 사육장(건물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B 타입 미래형 100KW 550만원(예상) 현금투자대비(년 40% 수익가능)
최단 2년6개월 자금회수가능

모듈·LG·한화큐셀(단결정)
인버터·ABB(이태리)·카고(독일)

분양지역

- 경기도 안성시 잔여분 2기
- 영남 신북면 잔여분 5기 (선로 대기중)
- 영광 흥농 잔여분 3기

2019년 8~10월 준공예정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개발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87-8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에너지관리공단 80% 용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농협 2018. 5. 1. 대통령령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전·답 가능)

● 한전과 20년 장기 계약 안정적 투자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부지 매입합니다(전·답가능)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지!

전국대표 ☎ 1588-1543 · 010-3645-1479